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

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원고 1 외 189인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

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피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

담당변호사 정인진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4. 9. 10. 선고 2003나79149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6. 15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

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, 원고들은 사실심의 변론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보수금을 환급세액의 25%에서 9%로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보수금을 환급세액의 9%로 감액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, 기록에 의하면, 피고가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소외 1 등으로부터 보수금의 감액을 요청받고, 2001. 7.경 전국전력노동조합 측과 ① 피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나머지 약 7,000명도 피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것, ② 2차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경우 그 수수료는 위 약 7,000명을 포함하여 25%로 할 것, ③ 수수료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1차 이자소득세 환급에 따른 수수료를 9%로 감액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나 위 전제조건 자체가 이행되지 않아 더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바, 원심이 보수금감액약정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,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감액약정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, 대리업무수입의 경위, 보수금의 액수,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, 난이도, 노력의 정도,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인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,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

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세무사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한 약정보수액의 감액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제반 사정, 즉 이 사건 세무대리는 원고들 등 의뢰인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문제인식과 적극적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, 당초 세무대리업무 처리비용은 환급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은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오직 성공보수금 약정만을 한 점, 원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세액을 전부환급 또는 원천징수 면제를 전제로 한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,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위임인 수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약 25,000명에 이르러 위임인당 환급액은 소액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의 총액은 약 22억 원에 달하며, 위임인의 수에 비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‘중간정산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’, ‘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절차는 어떠한지’ 등으로 모두 동일한 점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, 집기 등을 구입하였으며, 전산인력을 고용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점,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받기로 하였던 보수금은 피고가 1,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까지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복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예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1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2001. 5. 4.자 질의회신을,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의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인 소외 2에 대

한 위 2002. 5. 17.자 결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환급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원고들 명의로 위 근거들을 얻은 것은 아니었으나 위 2002. 5. 17.자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 쟁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, 피고는 2001. 5. 말경 원고들을 포함한 의뢰인들 약 25,000명을 대리하여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서류를 작성, 제출하였고, 2002. 7. 5.경 2차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별 전국 99개 관할세무서에 일제히 발송한 점, 피고에게 세무대리를 맡기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이는 관련 질의회신, 피고의 노력, 과세관청의 결정 등이 기여함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심이 피고의 약정 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피고의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%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,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바, 거기에 심리미진,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세무사의 보수금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_____

대법관 고헌철 _____

주 심 대법관 양승태 _____

대법관 김지형 _____